선관위, 전화선거운동·언론 후보토론회 상시 허용 추진

생활 속 선거운동 가능 선거 참여 혁신 이룰까

대선 TV토론 지지율 10% 이하 후보 배제도

앞으로 유권자와 후보자들이 오프라인상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나,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선거일 당일만 빼고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0% 이하 후보는 2차 토론에서 배제하고 3차 토론에는 지지율 상위 1·2위 후보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등 대선 TV토론의 참여 범위를 축소하는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이 추진된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선관위는 기존에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 배부, 시설물 설치 등을 무조건 금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인쇄물이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선거 관련 내용을 담은 시설물 등만 규제하기로 했다.

개정의견에 따르면 선거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만 개최를 금지할 뿐, 국민운동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하는 집회나 모임은 허용된다.

선관위는 또 정치신인의 진입 장벽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상시 허용하되 선거 과열을 막기 위해 선거운동은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이 제한적이지만 시기적으로는 상시 허용되는 것"이라며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언론기관 등이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 서열화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삭제해 서열화를 허용키로 했다.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할 경우, 개별적으로 옥내에서 유권자와 만나 자신의 정책이나 공약을 설명하고 참석자와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예비후보자들이 타운홀미팅, 북콘서트 등의 형태로 유권자와 정책토론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종편을 포함한 언론사 및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대담, 토론회도 상시 허용된다.

아울러 투표율 제고방안의 하나로 4·24 재·보선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의 투표 마감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거소투표 대상자의 인터넷 신고를 허용하고, 재외선거인명부는 한 차례만 등록하면 되도록 '영구명부제'를 도입하며 인터넷·우편을 이용한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등을 허용하는 쪽으로 선관위는 개정의견을 마련했다.

이 같은 개정의견은 유권자와 후보자 간의 거리를 좁혀 국민의 정치·선거 관심 제고와 궁극적으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각계의 개선의견을 수렴했다"며 "60년 넘게 고착돼 온 규제 중심의 선거문화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오는 6월 제출할 개정의견은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논의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신당설 나돌자… 강동원 진보정의 탈당

남원·순창 지역구 … '호남발 정계개편 가시화' 촉각

안철수 "신당 창당설은 진도 너무 많이 나간 것"

강동원 의원이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진보정의당 탈당을 공식 선언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남원·순창이 지역구인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이 2일 탈당,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4·24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설이 나도는 시점에서 강 의원이 탈당을 결행했기 때문이다.

특히, 강 의원의 지역 기반이 호남이라는 점에서 '호남발(發) 정계개편'이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이강래 의원을 누르고 당선돼 화제를 모았다. 1985년 민주화추진협의회 김대중 공동의장의 비서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고,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 비서를 역임했다.

이러한 경력을 지닌 그가 민주당이 아닌 무소속행(行)을 택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호남 민심이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해석과 함께 '안철수 신당'이 현실화되면 합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 의원은 '안철수 신당'이 현실화되면 합류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안철수 신당과 무관하게 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서도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이렇게 됐는데, 우선 무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민심 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그의 탈당이 '안철수 신당'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 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안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전후해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안철수 신당에 호남 민심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 의원의 탈당이 반대로 '안철수 신당'의 폭발력을 제한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아직 신당에 대한 정지작업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탈당이 단행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기존 정당들의 '안철수 경계심'을 강화시킨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친노(친노무현)·주류측의 이용섭 후보는 비주류인 김한길 후보가 대표에 선출되면 안 의원과 연대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안철수 경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를 반영하듯 안 의원은 신당 추진에 거리를 두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의장을 예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당 창당 질문에는 "그것은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강동원 의원의 합류설에 대해서는 "강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도시재생특별법 국회 통과

광주 구도심 활성화 '탄력'

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도시재생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도청과 시청이 이전한 광주 동구 등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는 등 광주의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을 위한 기본 방침과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해 기존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 기존 주택의 신축과 보수를 지원하고, 도로와 주차장 등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및 높이 제한 등의 건축규제에 대한 예외를 부여하며 도로·공원과 같은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필요한 비용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19대 국회 의정활동의 첫 법안으로 '구도심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안은 박주선·서병수·양승조·안민석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의 내용을 병합하고 조정한 안이다.

박 의원은 2일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경제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며 "이번 법 통과로 도시재생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도심재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간 신도심 확장에만 나섰던 정책을 바꿔 이제는 신도심과 구도심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이번 법률안 통과로 구도심이 다시 살아나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짐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KTX 정차역 광주송정역으로 … 일부 광주역 반복 운전

광주시 최종안 정부에 건의

광주시가 KTX 정차역을 광주송정역으로 하고, 일부 노선은 광주역으로 반복 운전하는 최종안을 확정, 정부에 건의했다.

광주시는 2일 KTX 정차역 논란과 관련해 "기존 KTX 광주역 이용객 편의와 지역여론 등을 감안해 광주송정역까지 운행한 뒤 광주역으로 반복운전(후진)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며, 조만간 협의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하남역 인근 분기 후 광주역 진입 ▲정읍역 분기 후 기존 호남선 이용 광주역 운행 ▲광주송정역까지 운행 후 광주역으로 반복 운전 ▲광주송정역까지 운행 후 일반열차 셔틀운행 등 4개안을 검토해 왔다.

광주시는 KTX 운행방안 수정안을 통해 '하남역 인근 분기후 일부 편수 광주역 운행'과 '광주송정역까지 운행후 일부 편수 광주역 진입' 방안을 건의해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재 4개안 중에서 '광주송정역까지 운행 후 광주역으로 반복 운전'과 '광주송정역까지 운행 후 일반열차 셔틀운행' 등 2개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한국교통연구원의 'KTX 정차역 이원화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광주시와 협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골만 더 깊어져서 큰일이다